

급물살타는 행정통합... ‘슈퍼 광역지자체’ 탄생하나

행정통합 절차·전망

입법·시도민 공감대 등 해결과제 산적
시·도의회 동의 필수...핵심 변수 부상
地選 전 절차 마무리까지 시간표 촉박
일각 신중론도 고개...정치적 셈법 분주
李대통령 9일 간담회 방향 가를 분수령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추진 국면으로 접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여부가 향후 행정 통합 방향과 속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李대통령 내놓을 메시지 이목 집중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합동 참배를 한 뒤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에 대해 환영하며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아침, 대통령님과 한 장의 사진을 남길 기회가 있었다. 청와대 신년 인사회 자리였다”며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대해 웃으시면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수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행정 통합 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김매리 기자

했어요’ 하셨다”고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님 내외분께 인사드리며 오늘 아침 광주·전남 통합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잘 하셨네요’라고 덕담을 해 주셨다”며 “지방의 중요한 일들을 직접 챙겨주고 조력해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힘이 나고 즐겁다”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실은 4일 이 대통령이 오는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고 언론 공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총선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자리를 갖고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 가능성을 언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메시지가 나올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과 김 지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 원칙, 시기·방식 등 직접적인 의견 교환과 세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오찬 간담회가 향후 행정 통합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재정·권한 이양 원칙과 통합 일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경우 통합 추진에 결정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차 관문’

이와 함께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실질적인 통합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법 제정, 지방의회 의원 청취 또는 동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이전 처리라는 시간표를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사실상 1차 관문으로 꼽힌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행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제도는 단일 광역단체장 체제로 전환되고 시·도의회 역시 통합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단계는 주민 의견 수렴이다. 통합 선언문에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주민 투표를 실시할지, 의회 동의로 갈음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설득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4일 오후 강기정 시장 주재로 행정통합 추진 사전회의를 열어 시의회 간담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일 오전 9시 행정통합추진기획단 현판식·오후 5시30분 1차 실무회의에 이어 6일 시의회와 ‘행정통합 의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地選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 여부 촉각

가장 큰 관심사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행정 통합 선언과 함께 ‘6월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 목표를 제시했지만 시간표는 극도로 촉박한 실정이다.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가 현실화하려면 2월 중 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모든 절차를 불과 두세 달 안에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특별법 처리 시점이 사실상 오는 6월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 여부를 가르는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통합 속도를 둘러싼 입장차가 분명하다.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일부 인사들은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조기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숙의와 단계적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행의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 의회 동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다시 장기과제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모든 절차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할 경우 광주·전남은 32만 인구, 150조원 규모의 ‘슈퍼 광역지자체’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 /변은진 기자

행정통합 기대 효과

옛 광주전남연구원, 관련 연구장·단점 분석
도시중심 개발·통합 과정 갈등 가능성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행정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에 시·도민의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2023년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으로 분리)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광주·전남도 의뢰로

지역 경쟁력 강화·행정 비용 절감·공공서비스 효율화

‘광주·전남 행정 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주요 연구 내용은 광주·전남 현황 분석, 관련 계획·연구 검토, 경제 통합(메가시티) 및 행정 통합 등 추진 방안, 각계 각종 의견 수렴, 시·도민 이해 증진을 위한 공론화 방법·절차 등이다.

당시 연구원은 연구 보고서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경제·행정적 대전환을 위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5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과제는 ▲전통 제조업 위축과 산업구조 대전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으로의 대전환 ▲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른 사회 체제 대전환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대전환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대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광역 행정 통합을 제시했다.

광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데이터 처리 분야

및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자동차 산업은 AI를 기반으로 성장하면 우리나라 신모빌리티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남은 풍력, 에너지 산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나주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개발 등 주요 사업이 비교 우위를 지닌 가운데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 통합의 장점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 행정비용 절감과 편익 효과

발생, 주민 참여 적극화를 통한 역할 증대, 규모 경제를 통한 공공 서비스 효율화, 지방행정 조직의 재조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발생 가능한 단점으로는 행정기관 통합 과정에서 갈등과 관련한 주민 생활 서비스 비용 발생, 도시 중심 개발 가능성, 행정기관 개편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가 작성된 2023년과 지금은 산업·경제·정치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재 추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행정 통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과학적 혜택 등이 언급된 만큼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노인이 있는 곳이 곧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교통사고보행 사망자중 62%가 고령 보행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도
어르신이 보인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배려해주세요

